힐, PSI 동참 압박에 어정쩡한 한국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오늘 회동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지속 여부도 논의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7일 서울에서 북한의 핵실험(9일) 이후 처음으로 회동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9·14 한미 정상회담 이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구체화하다 핵실험 변수를 맞이한 두 사람은 이번 회동에서 안보리 결의 이행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입장을 조율하게 된다.

북한 핵실험 이후 한미 간에 처음 대면 접촉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케 된 만큼 이번 회동은 6자회담 참가국들의 향후 대응 기조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 12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회동, 13일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열리기 때문에 중국을 매개로 그간 조율된 양국의 입장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곧바로 오는 19일 서울에서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두 수석대표의 협의는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한 '조율된 조치'의 수위를 정하고 향후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대응 기조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전망이다.

힐 차관보의 방한이 라이스 장관의 서울 방문에 앞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협의 내용이 미국의 입장에도 즉각 반영될 것임은 분명하다.

양측은 우선 안보리 결의 이행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자산동결 및 해상 화물검색, 사치품의 대북 판매 및 이전 금지 등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양국이 취할 조치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기본적으로 대북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겠지만 만약 세부 이행 과정에까지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지 않은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힐 차관보는 13일 "북한 핵실험은 체제 속성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실수'"라면서 "라이스 장관의 한중일 순방때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문제가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의 업무영역이어서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수 있지만 힐 차관보가 유명환 외교부 1차관을 만나는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우리 정부는 PSI 참여 확대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않았지만 '남북해운합의서'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취할 추가 조치는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측은 이번 결의 채택으로 PSI 참여의 명분이 커졌음을 강조하고 우리 측은 PSI 참여확대에 대한 국내 여론, 북한의 '추가 조치'에 빌미를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금강산,개성공단사업 유지 문제도 양측간 미묘한 신경전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안보리 결의가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미측은 "북한 정권에 혜택을 주는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의 최근 발언에서 감지된 강경 입장을 견지하며 압박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연합뉴스

■유엔 결의에 대한 한·미 이견

한국	쟁점	미국
- 남북은 아주 정교하게 규정된 남북해운합의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의조항과는 무관 (정부당국자) - 남북간 무력충돌 위험이 있는 선박검문에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것 반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 한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PSI에 대한 협력 또는 참여 수준을 재검토해야 (숀 매코맥 미국무부 대변인) - PSI와 같은 기존체제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 등 모든 방안 검토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차관보)
- 이번 결의는 남북 경협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정부당국자) -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계속 해야 한다(김근태의장)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등 남북 경협	- 북한의 나쁜 행태에 더 이상 당근이나 보상은 없어져야 한다(토니스노 백악관 대변인) - 현 상황에서 모든 정부는 북한정권에 혜택을 주는 모든 지원 프로그램을 재검토해야 한다(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대북 제재 한·일 전략 차이

日 '견벽청야' 韓 '역보역추'

〈보루를 지키고 들판을 깨끗이〉 〈남이 걸으면 걷고 뛰면 뛰는 식〉

한국과 일본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했지만 양국의 입장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고 중국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중국 신민만보는 일본은 대북제재 결의에서 '견벽청야(堅壁淸野)'의 전략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기의 보루를 지키는 한편 주위의 사람이나 가축, 재물, 양식 등을 말끔히 없애서 적이 공격의 거점을 잡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내부의 요구가 이같은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추진하면서 주변 국가들에 비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심중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단아이며 일본 국민을 납치한 적대국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같은 일본의 판단의 증거가 됐고 일본이 더욱 강경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됐다고 신문은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 접촉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민족감정과 핵실험을 별개로 구분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1990년대 이래 한국은 '햇볕정책'을 교육과 정책홍보 등 각종 수단을 통해 냉전사고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안착시켰고 한국 국민들이 이를 공유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곤혹스러움을 느끼고 향후 정책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민족감정은 일순간에 제거될 수 없으며 대북제재에서 일본과 손을 잡고 싶어하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신문은 한국이 '역보역추(亦步亦趨)'의 전략으로 남이 걸으면 걷고 남이 뛰면 뛰는 식으로 대북제재 수위를 조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내부의 혼란을 원치 않고 있으며 평화통일에 대한 신념을 갖고 향후 대북 접촉을 더욱 신중히 하는 과정에서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신문은 북한의 핵실험 여파가 컸지만 모든 국가들의 대북정책이 바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어느정도 강화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문은 또 동북아정책의 복잡성이 더해가면서 한·일간에 미묘한 파랑이 일고 있으며 유엔결의 이후 각국별 집행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공성진의원 '국지전 감수 PSI 참여' 발언 논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정부의 WMD(대량살상무기) PSI(확산방지구상) 참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의 국지전을 감수하고서라도 PSI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16일 "한국전쟁 이후에도 서해교전, 연평해전 그리고 동해안 잠수함 침투와 같은 국지전 성격의 분쟁이 많았다"면서 "이런 것들은 PSI 확대 이후에도 계속 있을 것인 만큼 이를 두려워해서 유엔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한반도 평화를 모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공 의원의 망언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한나라당은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현장과 시각 ■

지방중기청의 존재이유

이 종 태
경제부 차장

지난주 초 모 일간지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펼친 설문조사 때문에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발칵 뒤집혔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12개의 지방중기청을 비롯해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환경청 등을 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설문결과가 불을 질렀다.

참여정부 초기 소장학자들이 지방중기청을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조직개편안을 낸 적이 있었기에 중기청 직원들은 또한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에 바빴다.

지방중기청의 지자체 이관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다. 지자체와 지방중기청 간의 이원화된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단일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각도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지방중기청의 역할이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있다면, 응당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먼저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난 2004년 정부혁신위원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두차례 설문에서 중기인들은 '현행대로 지방중기청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중기인들이 자금지원 등 단순지원업무만을 처리하는 지자체보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 자금·판로·인력·수출 등 종합서비스를 수행하는 지방중기청을 선호하고 있다는 선언인 셈이다.

지방중기청의 위상에 관한 국내외의 흐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중기인들의 요구로 지난 98년 폐지된 대전·충남중기청이 2002년 부활했고, 최근에는 경기 북구, 울산시, 충남 서북부 지역의 경우 '지방중기청 추가 설치'를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해놓은 상태다.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중앙의 지방조직이 지자체 및 민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 현장밀착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이 10개 광역지방청, 71개 지방청, 15개 출장소를 운영하고 영국이 9개 지방청, 45개 민간기관, 일본이 9개 지방경제산업국을 풀가동하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현명한 구조조정은 무분별하게 없애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다. 합리적인 조정과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혜가 우선돼야 한다.

지자체는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중기청은 중앙과 연계해 중소기업 육성정책개발, 시험·연구개발, 수출지원 등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정립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jtlee@kwangju.co.kr